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8월 9일(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황수성 중견기업정책과장, 강기성 사무관(2110-5164) 원영준 혁신지원과장, 박홍일 사무관(2110-3977) 이원주 성장촉진과장, 양정식 사무관(2110-4580)		

중소기업의 희망, 중견기업 3,000개 만든다.

- 가업승계, 하도급, R&D 세액공제 등 중소→중견 성장 걸림돌 제거 -
- 기술개발 확대, 인재확보, 경영, 수출 등 혁신역량 강화 -
-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확보 -

추진 배경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한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인재확보, 기술개발, 경영혁신, 글로벌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8.9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경제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5월에는 중견기업 정책추진 전담 조직인 지식경제부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를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와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8.7일 지식경제부장관 주재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고용부 등 관계기관 차관급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의견조율을 거쳐 수립되었다.

* 중소·중견기업 성장애로(중견기업연합회, '12)
  - ① 전문인력 확보(38.1%), ② 조세 혜택 감소(37.3%), ③ 자금조달 곤란(31.4%), ④ 하도급 등 보호장치 배제(23.2%) 등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핵심 부담 완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 가업승계 >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13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던 상한선(매출 1,500억원)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에 맞추어져 있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 졸업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가업승계 공제시 고용유지 조건으로 인해 대상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업승계 공제 범위 확대 방안



* 매출 1,500~2,000억 구간 해당기업('10년 기준) : 90개사
  - 고용 : 6만명, 60세 이상 경영자 : 49개사(54.4%)
*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이후에는 10년간 120% 고용유지 조건 충족 필요

< 하도급 >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특히, 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12)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 평균적으로 대급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하여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도급 제도 개선 방안

◈ **하도급 현황**

○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게 60일 이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로부터는 90~120일 어음을 받는 등 자금애로 발생
  * 중견기업이 하도급시 평균결제일 : 60일 이상 29.7%(중견기업연합회, '12)

◈ **개선 방안**

○ 기업간 협상력 차이에 맞는 제도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촉진
  * (現) 대-중소 및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 (개선) 대-중견 및 중견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추가인정 추진

< 하도급 관련 중견기업 사례 >

① A사 : 지급기간(평균 57일)과 수령기간(평균 75일) 차이에 따라 연간 약 7.3억원(영업이익의 31.7%)의 추가적 금융부담 발생(당사 분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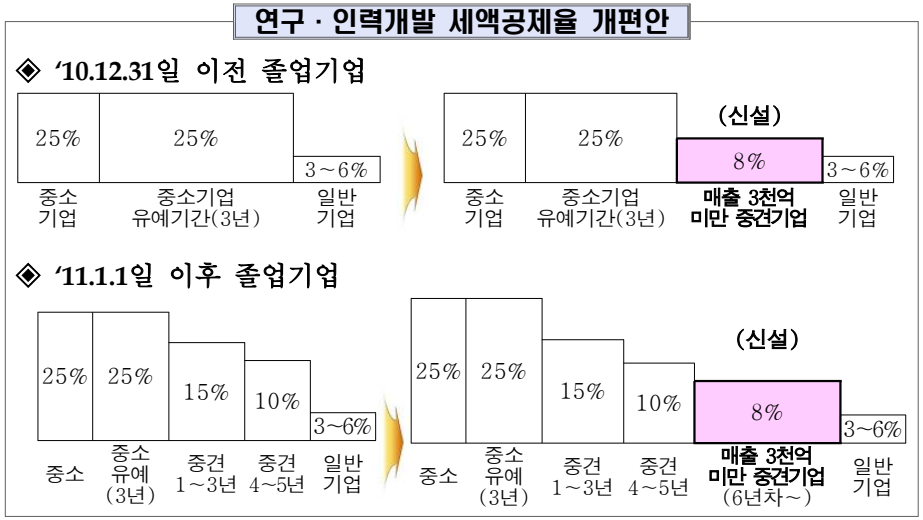
② B사 : 지급기간(평균 30일) 및 수령기간(평균 120일) 차이에 따라 연간 약 8.3억원(영업이익의 11.4%)의 금융부담 발생(당사 분석치)

< R&D 세액공제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한다. 지난 '11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하였으나, '10년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은 3~6%의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아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공제구간 신설에 따라 '10년말 이전에 졸업한 중견기업과 '11년 이후 졸업기업으로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이 경과한 기업들은 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어, R&D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 '10년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950여개 수준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 개편안



< 금융애로 해소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중견기업 초기에 자금난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의 중견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31.4%의 기업이 자금조달을 지적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

* 산업은행 : 중견기업 대출 확대(8.2조원 → 9조원), 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 금리우대(0.3~0.5%p 감면) 등 추진

* 정책금융공사 :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 자금공급 목표 상향조정('12년중 4,100억원 → 6,100억원)

② 인재확보 시스템 강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전문 기술개발 인력 등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중견기업은 취업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에 해당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인식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장기재직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결과(중견기업연합회, '12) **>**

◈ 성장에 따른 애로요인 1위 : **전문인력 확보**(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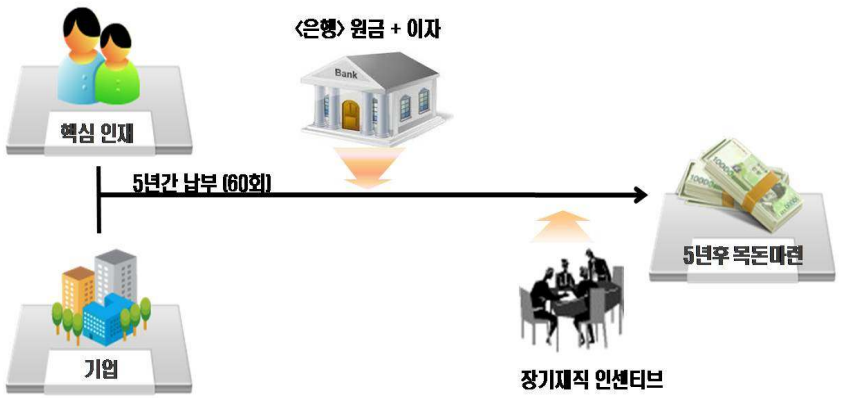
○ 1년 이내에 62.7%가 이직하며, 5년차 이상이면 6.1%로 이직 감소
  – 가장 필요한 인력 : 고급 R&D 인력(37.3%)

○ 인력확보시 가장 큰 애로 : 대기업 대비 낮은 인지도(39.9%)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재직에 부응하는 목돈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차세대 리딩 엔지니어」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적용 예시** : 재직자 및 기업이 각각 매월 50만원씩 적립할 경우 5년 이후에 약 7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중견기업의 근무환경, 복지후생 등의 정보를 취업 예정자에게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 언론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우수 중견기업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중견기업 취업정보를 앱, 팸플릿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의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체험형 취업연계 프로그램(브리지 스쿨)을 현재 인천에서 부산, 광주 등 5개소로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직무 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등 교육생의 중견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문인력 채용지원, 취업인턴제,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 대상기업 범위를 현재 기준 초과시 적용제외 이전 3년간 유예에서 유예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現) 지원적용 기준(제조업은 종업원수 500인 이하) 초과시 3년간 졸업 유예
  → (개선) 유예기간 확대 검토

외부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대기업 퇴직엔지니어, 퇴직연구원 등으로 「중견기업기술지원 멘토단」을 구성하여 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의 수요에 따라 취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석·박사 학위과정을 중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과제 등의 수행시 적극 활용하여 중견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정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을 확대한다.

③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투자도 늘린다.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년 1.6%에서 '15년 6%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과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한 분야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지경부 R&D 투자비중 : <中小> ('10) 26.2% → ('15) 34%
  <中堅> ('10) 1.6% → ('15) 6%

정부출연 연구소의 중견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개인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와 연계한 금리 우대 등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④ 시스템 경영 및 글로벌화 가속화

CEO가 인사, 재무, 마케팅 등을 모두 담당하는 1인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제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영혁신 지수를 개발·보급하고, 민간 주도의 경영진단 컨설팅과 CEO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경영혁신 추진 방향 >

중소기업 경영		중견기업 경영
1인 경영, 매출·품질관리 중심 내수·단순 수출	⇒	시스템 경영, 윤리경영, R&D·직접금융·지재권·디자인 등 글로벌 시각으로 전환

또한, 채권발행, 주식 상장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연기금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특허심사 청구료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경영도 활성화한다.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FTA 수혜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FTA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분야의 절충교역 연계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KOTRA의 지역본부별로 현지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현지 진출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기업 면담주선, 유망기업 추천 등 마케팅·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도 '11년 9.9조원에서 '13년 17.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⑤ 업종 · 지역별 중견기업 육성

기술전망, 국내외 시장분석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선도 업종 분야(예시)

① 중견기업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분야

* 예) 개량신약 : 신약(10~15년, 200억원 이상)에 비해 개발비용, 기간, 위험성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3~6년, 50억원 이상)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제약사에 적합

② Global Player가 중견기업 중심인 분야

* 예) 태양광 :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 분야

③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초기에 지배할 수 있는 분야

* 예) 네트워크 장비 :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선 엑세스장비, 스마트 IP N/W, 광가입자망 등 신기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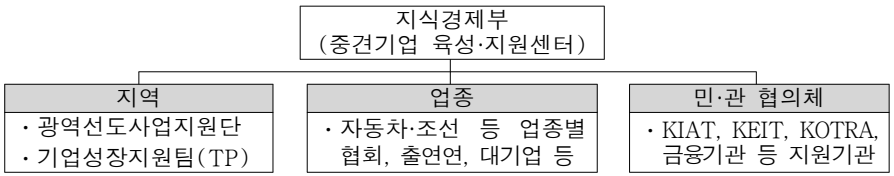
④ 多중소기업-小중견기업이나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 예) 금형·주조 : 10,000개 이상의 기업 중 중견기업은 6개에 불과

또한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⑥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기업애로 해결,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센터」를 금년내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업종별 협회·단체, 출연연, 대기업 등 업종별 지원체계와 산업기술진흥원, 코트라, 금융기관 등 각종 지원기관과 연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령·정책·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기존 대-중소기업 이분법적 체계에 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기업별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기업성장 이력차트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성장 장애요인 극복방안 마련 등 맞춤형 성장통 해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업간 재결합을 위한 원활한 행정절차 처리를 지원하고, 중견기업 M&A에 필요한 매물정보·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한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중견기업 전용펀드, 신성장동력 펀드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위한 자금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용펀드 : (정책금융공사 중심) 6개 펀드, 총 1.1조원, 투자집행률 55.5%
* 신성장동력펀드 : (지경부 중심) 9개 펀드, 총 1.0조원, 투자집행률 35.9%

[별첨]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